

## 시론



남성욱

- 現)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

##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전망: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이 수교한지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강산이 세 번 바뀌면서 국제정세도 변하였고 한중관계도 크게 달라졌다. 지난 2016년 경북 성주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양국 관계는 정체 상태다. 대중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누리던 한국은 금년 들어 적자로 전환했고 폭이 늘어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김치, 한복 등을 둘러싸고 원조 논쟁이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는다. 양국 국민간의 호감도는 북한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동북아는 물론 국제정치 역시 변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정치의 구조적인 틀(frame work)이 변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을 통한 국제 질서 유지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갈등은 7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자안보기구인 유엔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특정 국가를 침공했을 때 유엔을 통한 질서 유지가 작동되지 않는 현실은 각국이 개별적인 양

자 및 다자 동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동맹에 의한 안보는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중립지역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국제질서의 형성으로 유엔보다는 국가 간에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에 따라 글로벌 블럭 안보(Global Bloc Security)가 부각되고 있다. 최근 NATO가 12년 만에 신(新)전략개념(NATO 2022 Strategic Concept)을 도입하여 새로운 전략 환경을 반영한 것은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한·중 양국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동북아에서는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중화민족 부흥을 내세우며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시도하면서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중국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 중국이 10년 내에 대만 통일을 공언하며 타이완 해협의 긴장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린 수교 30주년 행사에는 정상간 축하 서한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위원총리,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에서 수교 30주년 기념 축전을 교환했다. 리 총리는 축전에서 한중이 '이사 갈 수 없는 영원한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고 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2022년은 미래 30년의 한·중 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이다. 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고 수교 이후 정치, 외교,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양국 관계

는 전례 없이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세계 공급망의 교란과 함께 동북아 경제안보 지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운 30년을 앞두고 양국은 크게 3가지 문제에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정치외교 문제,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경쟁적으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경제협력 문제,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문제 등이 시급한 해결과제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이후 한류를 금지하는 한한령(限韓令·한국 제한령)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보복조치를 취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한령의 여파로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한류에 기반을 둔 서비스업과 유통업은 물론 제조업에서도 전방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한국은 2019년 중국이 주도하는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에 가입 하여 양국의 교역 확대에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베이징과 옌청에서 공장 증설과 생산량 증대 일로를 걷던 현대차와 기아차는 사드 여파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중국 생산량이 각각 3분의 1수준으로 격감했고 기존공장 일부를 매각했거나 매각이 검토되고 있다. 롯데그룹은 심양 유통단지 건설 등 중국 사업을 사실상 전면

철수해야만 했다. 한한령은 자유무역 질서가 대외정책 변화에 의해서 급격하게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한중 간 디커플링(脫동조화) 경향으로 양국이 보완적인 경제협력에서 경쟁적인 관계로 바뀌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19개국 국민 2만45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의 80%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일본인 응답자는 87%, 미국인 응답자는 82%가 부정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권 기간 내내 대(對)중국 친화정책이 진행됐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5%를 상회한다는 점, 중국에게 한국이 최대수입국 1,2위를 다 툴만큼 양국간 교류 협력의 폭이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80%에 이르는 부정적 평가 수치는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의 위상과 역량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에 거는 기대 역시 30년 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중국은 G2국가로서 전랑(戰狼, Wolf Warrior diplomacy)외교를 내세우며 국제사회의 패권을 모색하고 있다. 미래 30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한중 양국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한중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수혜를 함께 나누는 상호보완적 이익공동체 구축, 평등하고 호혜적인 양국 관계 지속, 상대국의 경제적 발전과 안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강화해야 한다.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협력의 청사진 등 한중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지탱해온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

상호 존중의 새로운 한중 협력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한중 지도자 간의 셔틀외교, △전략대화의 내실화, △지방 정부 간 교류와 민간 교류 및 공공외교의 활성화 등을 통해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며 상생과 발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위급을 포함한 여러 단계에서 긴밀히 교류하고 △기후변화, △원자재 공급, △보건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경제협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량은 50배 가까이 성장하며 지난해 3,600억 달러에 도달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올해는 한국이 중국의 제2의 교역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회 내에서 달라진 양국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글로벌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간 보완 및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모범적인 경제협력의 사례를 발굴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한중간 경제·무역은 상호보완성과 잠재력이 강하다. 양국의 공급망과 산업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발전 기회로 삼아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양국의 경제 협력 투자는 제조업을 넘어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중국 광저우의 현대차 수소, 시안에 삼성 반도체 공장 등 한국 기업들이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고 있다. AI 등 디지털 인프라 및 문화콘텐츠 등 앞으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새롭게 발전시킬 성장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다만 한국은 중국에 대한 과도한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편중 현상은 비오는 날 반드시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수출입 다변화를 통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식량 에너지 등 대북 지원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핵 도미노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3不(사드 추가 배치·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 1限(사드 운용 제한)이라는 독단적인 명제를 한국에 강요해서도 안된다. 단순 협의 사실을 선서(宣誓)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가 선시(宣示)라고 변경하는 등 중국의 일방적인 행태는 내정간섭인 만큼 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신설될 차관급 외교안보(2+2) 대화에서 주권 침해적인 논의는 최소화해야 한다.

넷째,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는 공자의 언급대로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 인적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히 미래 세대인 청년들 간에 소통과 왕래가 확대되어야 한다. 양국의 젊은이들이 상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상대에 대한 영향력을 의식한 과도한 기대와 요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정치에 연계된 경제 관계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경제는 가급적 정치상황에서 벗어나 기술과 가격, 품질 등의 요인으로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과도하게 평가하여 우리의 대중국 대응 카드를 소진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만 양국 관계는 협력과 동시에 갈등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냉정하고 철저한 현실 인식 속에서 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